행정학개론

해설위원 : 이 명 훈 교수

본 문제의 소유권 및 판권은 **(주)윌비스고시학원**에 있습니다. 무단복사 판매 시 **저작권법**에 의거 경고조치 없이 고발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반드시 OMR카드에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OMR카드 작성시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총평>>

2017년 국가직 9급 행정학은 세부적이고 지엽적인 법령문제가 다소 많이 출제되어 수험생 입장에서 체감상 난이도가 높게 느껴졌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체적으로 문제 5번「정부업무평가기본법」상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의 구성, 문제 11번「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부정청탁의 대상, 문제 19번 공공서비스 공급주체의 유형과 예시에 대한 문제는 다소 지엽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위의 문제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난이도 중(中)수준의 문제들로 구성되어 이해 중심으로 행정학을 학습한 수험생이라면 큰 어려움 없이 문제해결이 가능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동안의 수고와 노력이 헛되지 않고 좋은 결과로 귀결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다만, 당부드릴 것은 지금부터는 국가직 시험의 결과에 너무 연연해하지 말고 다음 시험을 위해 마음을 다잡으시고 차분히 계획을 세워 다음 시험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이번 국가직 시험에서 틀린 문제들을 반드시 점검하여 다음 시험에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문 1. 대표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엽관주의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등장하였다.
② 관료의 국민에 대한 대응성과 책임성을 향상시킨다.
③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으나 역차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④ 우리나라도 대표관료제적 임용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정답] ①
[해설] 대표관료제는 형식적 기회균등을 추구하는 실적주의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등장하였다(하이패스 행정학 p577).

<<핵심체크>> 대표관료제

의의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주요 집단(인종·종교·성별·직업·신분·계층·지역 등)으로부터 한 나라의 인구 전체 안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관료를 충원하여 정부 관료제가 그 사회의 모든 계층과 집단에 공평하게 대응하도록 하는 제도
배경	행정국가화 현상(관료의 자원배분권 확대)
전개	킹슬리(대표관료제 처음 제시), 크랜츠(비례대표관료제 제시), 모셔(적극적 대표성과 소극적 대표성을 구분하고 관료들의 상징적 측면 강조)
대표성의 의미	• 소극적·수동적·피동적·구성론적 대표성(상징적 측면 ; standing for) :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주요 집단의 인구비례에 따라 관료를 충원하는 것 • 적극적·능동적·역할론적 대표성(행동적 측면 ; acting for) : 관료들이 자신들의 출신집단을 대변하여 정책을 결정하고 출신집단에 책임을 지는 것 • 관계 : 대표관료제는 소극적 대표성이 자동적으로 적극적 대표성을 보장한다는 가정을 전제하고 있으나 소극적 대표성과 적극적 대표성의 관계는 현실에서 명확하게 검증되지 못했으며 허구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음
장점	① 실질적 기회균등(적극적·진보적 평등), ② 관료제의 민주적 대표성 확보, ③ 행정의 대응성 증진, ④ 사회적 형평성 제고, ⑤ 행정의 신뢰성 증진, ⑥ 행정의 책임성 제고(민중통제를 관료제에 내재화하여 행정통제 강화), ⑦ 주관적(심리적) 책임의 적정화를 통한 공정성 증진, ⑧ 다양성 관리기법 발전, ⑨ 실적주의의 폐단 시정, ⑩ 합리적 정책결정 등
단점	① 역차별과 사회적 분열 조장, ② 집단이기주의의 발현, ③ 공직취임 후의 재사회화 불고려, ④ 대표성 확보의 기술적 어려움, ⑤ 행정의 전문성과 생산성 저하, ⑥ 시민통제의 무력화, ⑦ 감축관리와 충돌, ⑧ 자유주의 원리와 충돌 등

문 2. 신행정학(New Public Administration)의 핵심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효율성 강조	ㄴ. 실증주의적 연구 지향
ㄷ. 적실성 있는 행정학 연구	ㄹ. 고객중심의 행정
ㅁ. 기업식 정부 운영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ㄹ, ㅁ

[정답] ③
[해설] 1960년대 등장한 신행정론은 전통적 행정이론이 사회문제해결능력이 없음을 비판하고 적실성 있는 행정학 연구를 지향(ㄷ)하며 등장한 이론이다. 신행정론은 사회적 형평성과 고객중심의 행정(ㄹ)을 지향하였다(하이패스 행정학 p94).

<<오답정리>>
ㄴ. 신행정론은 실증주의적 연구를 지향했던 행정행태론이 사회문제해결능력이 없음을 비판하고 행정의 사회적 적실성과 실천을 위해 규범주의적 연구를 지향하였다.
ㄱ, ㅁ. 효율성을 강조하며 기업가적 정부 운영을 지향했던 행정이론은 1980년대 등장한 신공공관리론이다.

<<핵심체크>> 신행정학

개념	전통적 행정이론이 사회문제해결능력이 없음을 비판하고 행정의 사회적 적실성과 실천, 정책지향, 행정학의 정체성을 강조하면서 등장한 이론적 경향
대두 배경	• 현실적 배경 – 사회적 격동기의 급박한 사회문제 해결 필요성 • 이론적 배경 – 행태주의가 사회문제해결능력이 없음을 비판하고 등장
전개	• 왈도(Waldo) 주도하에 시라큐스 대학 주최의 미노브룩 회의에서 주창 • 마리니(Marini)는 회의의 내용을 정리하여「신행정학을 지향하며」라는 저서 발간
이념	사회적 형평성과 고객에의 대응성
정책	정책지향적 접근으로 정책학의 발전에 기여
조직	계층제를 비판하고 민주적 조직설계를 위한 탈관료제 지향
인사	행동주의적 행정인인 적극적 행정인(적극적 책임) 중시
통제	시민참여를 통한 시민통제 중시
연구 방향	① 순수과학적이기보다는 응용과학적, ② 서술적이기보다는 처방적, ③ 기관지향적이기보다는 수익자지향적, ④ 가치중립적이기보다는 가치지향적, ⑤ 과학적이기보다는 철학적
학문적 특징	• 행정의 적실성, 기술성(처방성), 문제지향성 강조 • 행태주의(실증주의)의 지양과 규범주의(가치주의) 추구 • 과학적 연구의 배격이 아닌 과학적 지식의 활용 강조 • 행정학의 정체성 극복(Waldo – 전문직업주의 확립) • 다양한 학문적 경향을 포함하고 있어 학문적 응집성 결여

문 3. 관료제 병리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규칙이나 절차에 지나치게 집착하게 되면 목표와 수단의 대치 현상이 발생한다.
② 모든 업무를 문서로 처리하는 문서주의는 번문욕례(繁文縟禮)를 초래한다.
③ 자신의 소속기관만을 중요시함에 따라 타 기관과의 업무 협조나 조정이 어렵게 되는 문제가 나타난다.
④ 법규와 절차 준수의 강조는 관료제 내 구성원들의 비정의성(非情誼性)을 저해한다.

[정답] ④
[해설] 비정의성(非情誼性)이란 관료가 증오·감정·열정의 관계를 떠나 법규에 의한 공평무사한 행정을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 관료제의 순기능적 측면에 해당한다. 관료제의 법규와 절차 준수의 강조는 관료제 내 구성원들의 비정의성을 촉진한다(하이패스 행정학 p438).

<<핵심체크>> 관료제의 병리

훈련된(전문화된) 무능	관료들이 한 가지 기술에 대해 훈련받고 기존 규칙을 준수하도록 길들여져 타 분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새로운 조건에 적응하지 못하는 현상
할거주의(국지주의)	자신이 속한 부서나 종적인 서열만을 중시함으로써 횡적 관계를 형성하는 타 부서에 대한 협조와 배려를 하지 않는 배타적인 업무행태
피터(Peter)의 원리	계층제로 인하여 관료들이 무능력의 수준까지 승진하는 현상(관료를 무능화시키는 승진제도)
권력구조의 이원화	상사의 직위에 근거한 권한과 부하의 전문성에 근거한 권한의 충돌 현상

인간적 발전의 저해	집권적·권위주의적 통제와 법규우선주의, 비사인적 역할관계로 조직구성원의 사회적 욕구 충족 및 성장 및 성숙이 저해되는 현상
목표대치 (동조과잉)	관료들이 궁극적인 목표보다는 수단인 법규를 더 중시하는 현상(Merton)
번문욕례 (red tape)와 형식주의	불필요하거나 번거로운 문서처리로 인해 실질보다 형식에 치우치는 형식주의를 야기하고 신속한 업무처리가 곤란한 현상
변동에의 저항	규칙과 선례에 집착하는 등 보수적·현상유지적 성향을 지녀 변화에 둔감하고 변동과 쇄신에 대하여 저항적인 행태
무사안일주의	적극성이나 창의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선례만을 따르거나 상관의 지시에 무조건 영합하여 자리만 보존하려는 소극적인 행태
권위주의	권한과 능력의 괴리, 상위직으로 갈수록 모호해지는 업적평가기준, 법규우선주의로 인해 위계질서와 지배·복종의 관계를 중시하는 현상
관료제국주의	관료들이 권한행사의 영역을 계속 확장시켜 나가는 현상
마일(Mile)의 법칙	관료가 자신이 속한 조직, 지위, 신분을 대변하는 현상(관료들이 편협한 안목으로 직접적인 고객의 특수이익에 묶여 전체이익을 망각하는 현상)

문 4. 계급제의 장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무원의 신분안정과 직업공무원제 확립에 기여한다.
② 인력활용의 신축성과 융통성이 높다.
③ 정치적 중립 확보를 통해 행정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다.
④ 단체정신과 조직에 대한 충성심 확보에 유리하다.

[정답] ③
[해설] 계급제는 정치적 중립 확보를 통해 행정의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다. 다만, 계급제는 일반행정가주의를 지향하므로 공무원이 동일 분야의 직책을 담당하지 않고 여러 다양한 직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행정의 전문성을 저해할 수 있다(하이패스 행정학 p583).
<<핵심체크>> 계급제

의의	개별 공무원의 자격과 능력을 기준으로 계급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공직을 분류하는 제도(사람중심의 공직구조).
발전	농업사회의 전통(영국, 군주국가의 전통을 지닌 대륙법계 국가, 아시아 국가 등)
특징	① 3~4대 계급제, ② 계급 간 차별, ③ 고급공무원의 엘리트화, ④ 일반행정가 지향성, ⑤ 강력한 신분보장, ⑥ 폐쇄형 충원 체제, ⑦ 높은 수평적 융통성, 낮은 수직적 융통성 등
장점	① 장기적 관점에서 유능한 인재의 채용, ② 탄력적·융통적 인사관리 및 적재적소 배치, ③ 경력(능력)발전을 통한 관리자 양성, ④ 협조와 조정 용이, ⑤ 직업공무원제 확립 용이, ⑥ 현직자의 근무의욕 및 조직몰입 제고, ⑦ 인사관리의 용이성과 비용절감, ⑧ 직업적 연대의식 및 일체감 제고, ⑨ 규모가 작고 단순한 조직에 적합 등
단점	① 행정의 전문성 저해, ② 직무급 확립 곤란, ③ 의사결정의 합리성 확보 곤란, ④ 무사안일 및 특권집단화, ⑤ 권한과 책임의 한계 불분명, ⑥ 직무에 적합한 인재 확보 곤란, ⑦ 고객 요구 및 환경변화에 둔감, ⑧ 공직의 경직화 초래 등

문 5.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의한 정부업무 평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김포시와 도로교통공단은 평가대상에 포함된다.
② 관세청장은 자체평가위원회를 운영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이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위원이다.

[정답] ③
[해설]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의 3분의 2이상은 평가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행정자치부장관이 지명한다(하이패스 행정학 p388).
<<핵심체크>> 「정부업무평가기본법」

목적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통합적인 성과관리체제의 구축과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해 국정운영의 능률성·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기본방향			• 개별평가에서 통합평가로 전환 : 통합적인 정부업무평가제도의 구축 • 직접평가에서 자체평가로 전환 : 자율적인 정책개선 도모 • 단편적 성과관리(심사평가)에서 체계적 성과관리(기관평가)로 전환
정부업무평가 위원회	소속		국무총리 소속 하에 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 둠
	구성		위원장 2인(국무총리와 민간전문가)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행자부 장관, 기재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및 민간전문가)으로 구성
	기능		평가와 관련된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를 총괄
성과관리 및 평가			• 성과관리전략계획 :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수립하며 최소한 3년마다 타당성 검토 •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 : 국무총리가 수립하며 최소한 3년마다 타당성 검토
정부업무평가의 종류	중앙행정기관	자체평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자체평가위원회(민간위원이 2/3 이상 참여)를 구성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해야 함
		재평가	자체평가 결과의 객관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 국무총리가 정부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특정평가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관련 시책, 주요 현안 사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부문에 대하여 국무총리가 실시해야 함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	단체장이 자체평가위원회(민간위원이 2/3이상 참여)를 구성하여 평가해야 함
		합동평가	국가위임사무 등에 대하여 행자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합동평가위(행자부 소속, 민간위원이 2/3이상 참여, 위원장은 행자부장관이 민간위원 중 지명함)를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공공기관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외부의 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함
평가결과의 활용			① 평가결과의 공개, ② 평가결과의 국무회의 및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 ③ 평가결과의 예산 및 인사 등에 반영, ④ 평가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및 감사, ⑤ 평가결과에 따른 보상 등

문 6. 정책집행의 상향적 접근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대표적인 모형은 사바티어(Sabatier)의 정책지지 연합모형(Advocacy Coalition Framework)이다.
② 정책결정과 정책집행은 뚜렷하게 구분된다고 본다.
③ 집행현장에서 일선관료의 재량과 자율을 강조한다.
④ 안정되고 구조화된 정책상황을 전제로 한다.

[정답] ③
[해설] 정책집행의 상향적 접근방법은 집행장의 관점에서 집행현상을 설명하는 행위 중심적 접근방법으로 집행현장에서 일선관료의 재량과 자율을 강조한다(하이패스 행정학 p355).

<<오답정리>>
① 사바티어(Sabatier)의 정책지지 연합모형(Advocacy Coalition Framework)은 하향적 접근방법과 상향적 접근방법을 통합한 통합모형에 해당한다.
② 상향적 접근방법은 정치행정일원론의 관점에서 집행과정에서도 끊임없는 정책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보므로 정책결정과 정책집행은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는다는 시각에 입각해 있다.
④ 하향적 접근방법은 명확한 정책목표, 자세한 법령, 계층제적 통제 등 안정되고 구조화된 정책상황을 전제로 한다.

<<핵심체크>> 정책집행의 하향적 접근방법과 상향적 접근방법

구 분	하향적(Top-down) 집행	상향적(Bottom-up) 집행
연구대상	중앙정부의 정책결정과 정책집행	일선 집행 네트워크 구조
집행과정의 중요 행위자	정책결정을 하는 정부의 상층부로부터 일선 집행 담당기관과 정책 대상 집단을 대상으로 하향적 조명	정책집행기관과 정책 대상집단으로부터 정부의 정책결정 집단으로 상향적 조명
정책상황	안정적·구조화된 상황	유동적·동태화된 상황
최초의 관점	중앙정부의 결정	정책분야와 관련된 집행구조
초 점	일관되고 분명한 정책목표의 달성	집행 문제의 해결
정책목표	목표가 명확하여 수정 필요성 적음	수정 필요성 높음
결정과 집행	결정과 집행의 분리(이원론)	결정과 집행의 통합(일원론)
집행자 참여	참여 제한, 충실한 집행 중시	참여 중시
집행자 관점	통제와 순응	재량과 자율
집행성공의 기준	공식적 목표의 달성도, 집행의 충실성, 결정자의 의도에 대한 순응성, 정책성과 등	환경에의 적응성, 집행자의 바람직한 행동 유발(정책성과는 2차적 기준) 등

구 분	하향적(Top-down) 집행	상향적(Bottom-up) 집행
집행의 성공요건	결정자의 리더십	집행관료의 전문지식과 문제해결 능력
전반적인 초점	정책결정자가 의도한 정책목표를 집행기관이 성취했는가에 초점	정책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다수의 행위자들의 전략적 상호 작용에 초점
연구방법	연역적 연구, 거시적 연구	귀납적 연구, 미시적 연구
버만(Berman)	정형적 집행	적응적 집행
엘모어(Elmore)	전방향적 접근	후방향적 접근
나카무라	고전적 기술자형, 지시적 위임가형	재량적 실험가형, 관료적 기업가형

문 7. 허즈버그(Herzberg)의 욕구충족요인 이원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욕구의 계층화를 시도한 점에서 매슬로(Maslow)의 욕구단계이론과 유사하다.

② 불만을 주는 요인과 만족을 주는 요인은 서로 다르다고 주장한다.

③ 무엇이 동기를 유발하는가에 초점을 두는 내용이론으로 분류된다.

④ 작업조건에 대한 불만을 해소한다고 하더라도 근무태도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본다.

[정답] ①

[해설] 허츠버그(Herzberg)의 욕구충족요인 이원론은 욕구의 계층화를 시도한 매슬로(Maslow)의 욕구단계이론과 달리 인간은 불만요인과 만족요인이라는 이원적 욕구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이들 요인은 서로 독립된 별개로 작용한다고 보았다(하이패스 행정학 p512).

<<핵심체크>> 허츠버그(Herzberg)의 욕구충족요인 이원론

의의	• 기술자들과 회계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조사의 결과 인간은 불만(위생)요인과 만족(동기)요인의 이원적 욕구구조를 지니며 이들 요인은 서로 독립된 별개로 작용 • 만족의 반대는 불만족이 아니고 만족이 없는 상태이며, 불만족의 반대는 만족이 아니라 불만족이 없는 상태	
요인	위생요인(불만요인)	동기요인(만족요인)
개념	불만족을 느끼게 하는 요인	만족을 느끼게 하는 요인
성격	사람과 직무상황이나 환경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이 하는 일 사이의 관계
역할	불만족만 제거(생산성은 높여줄 수 없음)	동기부여(생산성을 높여주는 역할)
예	봉급, 감독방식과 내용, 작업조건, 대인관계, 임금, 직위, 신분보장, 정책과 관리(조직의 방침과 관행) 등	성취감, 인정감, 책임감, 승진, 직무 그 자체, 직무에 대한 만족감, 보람 있는 일, 능력신장 등
직무확충	직무확장	직무충실
한계	• 하위욕구를 추구하는 계층에 적용하기 곤란하여 일반화에 한계 • 중요사건기록법으로 연구자료가 수집되어 동기요인 과대평가 • 동기유발에 관심을 두지 않고 만족 자체에 관심을 둠 • 직무요소와 동기 및 성과 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 곤란 • 개인차 불고려	

문 8. 정부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감사원은 「정부조직법」에서 정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에 해당한다.

② 금융감독원은 「정부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이다.

③ 소청심사위원회는 행정자치부 소속으로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④ 특허청은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이 부여되고 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책임운영기관에 해당한다.

[정답] ④

[해설] 특허청은 「정부조직법」상 청(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설치된 중앙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책임운영기관은 정책기능과 집행기능을 구분하여 집행기능을 담당하는 독립기관을 설치하고 이 기관에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이다(하이패스 행정학 p470).

<<오답정리>>

① 감사원은 「헌법」에서 정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에 해당한다.

②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금융위원회 산하의 특수법인으로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에 해당한다.

③ 소청심사위원회는 인사혁신처 소속으로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문 9. 공익(public interest) 개념의 실체설과 과정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실체설은 집단 간 상호작용의 산물이 공익이라고 본다.

② 과정설의 대표적인 학자에는 플라톤(Plato)과 루소(Rousseau)가 있다.

③ 실체설은 공익이라는 미명하에 개인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④ 과정설은 공익과 사익이 명확히 구분된다는 입장이다.

[정답] ③

[해설] 공익실체설은 공익우선주의에 입각한 전체주의적 시각으로 공익이라는 미명 하에 개인의 이익(사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다(하이패스 행정학 p143).

<<오답정리>>

① 공익과정설은 공익을 사익 간의 타협 또는 집단 간 상호작용의 산물로 인식한다.

② 공익실체설의 대표적인 학자인 플라톤(Plato)과 루소(Rousseau) 등은 공익을 사익과 구별되어 선험적·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규범적·도덕적 실체로 인식한다.

④ 공익실체설은 공익과 사익이 명확하게 구분된다는 입장이다.

<<핵심체크>> 공익

개념	행정의 이념적 최고 가치이며 행정활동에 관한 최고의 규범적 기준	
특징	① 규범성, ② 역사성, ③ 동태성, ④ 모호성(불확정성), ⑤ 상대성	
대두요인	이론	후기행태주의(정치행정일원론) : 행정의 가치지향성 중시
	현실	행정국가화 현상 : 관료의 행위 및 윤리기준으로서 공익에 대한 관심 증대
공익실체설(적극설)	의의	공익이란 사익을 초월하여 선험적·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규범적·도덕적 실체
	근거	• 도덕적·규범적 실체 : 정의, 형평, 자연법 등 개별특수이익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사회전체로서의 공동선 또는 국가이익을 공익으로 인식 • 공유지의 비극 극복을 위한 규칙 등 사익집합 이상의 공익 인정 • 공동체실체설(신비주의적 형이상학적 공동체론) : 공동체를 살아있는 유기체로 보고 통치자에 의해 결정된 공동체 스스로의 의지와 욕구를 공익으로 인식 • 전체효용극대화설(공리주의) : 전 구성원의 총효용 극대화를 공익으로 인식
	특징	① 규범적·선험적 공익관, ② 집단주의 이론(공익우선주의), ③ 엘리트이론(비민주적 공익관), ④ 사법부 판례의 기준(집단이기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공익과 사익을 비교형량), ⑤ 관료가 공익결정에 적극적인 역할 수행
	비판	• 개인의 인권을 유린했던 전체주의의 이론적 근거 • 소수 엘리트의 주관적 가치를 객관적 가치로 전환시켜주는 비민주적 공익관 • 지나친 추상성 및 이념적 경직성(신축성과 융통성 부족)
공익과정설(소극설)	의의	공익이란 사익의 총합이거나 사익 간의 타협 또는 집단 간 상호작용의 산물
	근거	•이익집단론적 과정설
	특징	① 경험적·현실적 공익관, ② 민주적·절차적 공익관, ③ 정책과정의 합리화 중시(강한 이익집단에 의해 희생되기 쉬운 약자·대중·미래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적법절차, 대표관료제 도입 강조), ④ 관료가 공익결정에 소극적 역할
	비판	•대립되는 이익들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 제시 곤란 •집단이기주의의 폐단으로 잠재집단의 이익이나 사회적 약자의 이익 반영 곤란 •민주적인 토의, 협상, 경쟁이 발달하지 못한 신생국에 적용 곤란

문 10. 전략적 인적자원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장기적이며 목표·성과 중심적으로 인적자원을 관리한다.

② 개인의 욕구는 조직의 전략적 목표달성을 위해 희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③ 인사업무 책임자가 조직 전략 수립에 적극적으로 관여한다.

④ 조직의 전략 및 성과와 인적자원관리 활동 간의 연계에 중점을 둔다.

[정답] ②

[해설] 전략적 인적자원관리는 구성원 개인을 비용차원에서 다루던 전통적 시각에서 벗어나 조직목표달성의 핵심자원으로 인식하고 개인의 욕구와 조직의 목표를 연계하여 조직의 성과달성에 기여하도록 하는 새로운 인사관리방식을 말한다(하이패스 행정학 p574).

<<핵심체크>> 전통적 인사행정과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구분	전통적 인사행정(연공주의)	인적자원관리(성과주의)
인사관리	• 집권화(중앙인사기관)	• 분권화(각 부처에 위임)
인사기능	• 분절된 행정적 기능	• 상호연계적, 전략적 기능
관리방식	• 규격화, 경직화된 형식요건 중시	• 실적과 성과중심의 유연한 관리
조직구조	• 기능별 조직(개인별 문제해결)	• 과업형 조직(집단적 문제해결)
채 용	• 신규인력 정기 채용 • 신입사원 채용 중심 • 일반적인 선발기준	• 필요인재 수시 채용 • 경력사원 채용 강화 • 전문성, 창의성 중심의 선발기준
복무 관리	• 고정근무, 시간과 투입관리	• 자유 시간근무, 재택근무, 성과와 결과관리
교육 훈련	• 공급자 중심(강의식 교육)	• 수요자 중심(역량개발훈련 등)
평 가	• 태도와 근속 연수 중심의 평가 • 모호하고 불투명한 평가	• 성과와 능력 중심의 평가 •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
보상 및 진급	• 직급과 연차 중심의 연공 승진 • 연공형 월급제, 고정 상여금	• 직급 파괴 및 성과와 역량에 의한 승진 • 성과급제 등
퇴 직	• 평생고용	• 조기 퇴직 • 전직 지원 활성화

문 1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금지하는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②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③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 선발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④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정답] ②
[해설]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의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핵심체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부정청탁

부정청탁 금지대상	•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등 법령등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 인가 또는 허가의 취소, 조세,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범칙금, 징계 등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감경·면제하도록 하는 행위 •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법령을 위반하여 각종 심의·의결·조정 위원회의 위원,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시험·선발 위원 등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에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 선발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 입찰·경매·개발·시험·특허·군사·과세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을 법령을 위반하여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에 배정·지원하거나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하도록 하는 행위 •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 병역판정검사, 부대 배속, 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평가 또는 판정하게 하거나 결과를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의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법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 •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를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에 관하여 공직자등이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권한을 벗어나 행사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
부정청탁 금지 대상이 아닌 것	• 「청원법」,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국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기준에서 정하는 절차·방법에 따라 권리침해의 구제·해결을 요구하거나 그와 관련된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를 제안·건의하는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 또는 정책·사업·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건의하는 행위 •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하여 줄 것을 신청·요구하거나 그 진행상황·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확인·문의 등을 하는 행위 •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을 신청·요구하는 행위 •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하여 직무에 관한 법령·제도·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문 12. 무의사결정(non-decision making)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배적인 엘리트집단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이슈라도 정책의제설정단계에서 논의하려고 한다.
② 무의사결정은 중립적인 행동으로 다원주의이론의 관점을 반영한다.
③ 집행과정에서는 무의사결정이 일어나지 않는다.
④ 정책문제 채택과정에서 기존 세력에 도전하는 요구는 정책문제화하지 않고 억압한다.

[정답] ④
[해설] 무의사결정은 정책문제 채택과정 등 정책과정 전반에서 기존 세력에 도전하는 요구는 정책문제화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억압하고 방해하는 결정을 말한다(하이패스 행정학 p286).

<<오답정리>>
① 무의사결정에 의하면 지배적인 엘리트집단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이슈를 정책의제화되지 못하도록 의도적으로 억압하려고 한다.
② 무의사결정은 엘리트의 의사에 반하는 의사에 대한 중립적이지 않는 행동으로 엘리트주의적 관점을 반영한다.
③ 무의사결정은 정책의제설정과정뿐만 아니라 정책결정, 정책집행 등 정책의 전과정에서 발생한다.

<<핵심체크>> 무의사결정론

의의	지배 엘리트들의 특권, 가치관, 신념 등에 대한 잠재적, 현재적 도전을 좌절시키기 위해 엘리트의 가치나 이익에 반하는 사회문제를 정책의제로 채택되지 못하도록 의도적으로 방해, 억압하는 결정(Bachrach와 Baratz의 「권력의 두 얼굴」)	
등장배경	• 다알(Dahl)의 다원론에 대한 비판 : 다알(Dahl)은 권력의 밝은 측면만 인식했다고 비판 • 1960년대 흑인폭동	
특징	• 결정자의 무능력이나 무관심에 기인한 것이 아닌 결정자의 의도적 행위 • 정책의제설정과정 뿐만 아니라 정책과정 전반에서 발생 • 정책문제의 잘못된 인지로 인한 제3종 오류 야기 • 다원주의 국가에서는 엘리트가 아닌 특수이익집단에 의한 무의사결정 발생	
발생원인	① 불리한 사태의 방지, ② 과잉충성, ③ 지배적 가치의 부정, ④ 편견적 정치체제에 의한 부정, ⑤ 관료이익과 상충 등	
수단	폭력의 행사	테러, 구타, 암살 등(가장 직접적인 수단)
	권력의 행사	기존 혜택의 박탈에 대한 위협, 새로운 혜택을 통한 유혹, 적응적 흡수 등
	편견의 동원	정치체제 내의 왜곡된 지배적 규범이나 절차 강조
	편견의 수정·강화	기존의 규범이나 절차의 수정·보완(가장 간접적인 방법)
	기타	결정이나 집행의 지연 및 방치, 상징에 그치는 정책대안 채택, 위장합의 등

문 13. 정책결정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점증모형 – 기존의 정책을 수정 보완해 약간 개선된 상태의 정책 대안이 선택된다.

② 최적모형 – 정책결정자의 직관적 판단은 정책결정의 중요한 요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③ 혼합주사모형 – 거시적 맥락의 근본적 결정에 해당하는 부분에서는 합리모형의 의사결정방식을 따른다.

④ 쓰레기통모형 – 조직화된 무질서 상태에서 어떠한 계기로 인해 우연히 정책이 결정된다.

[정답] ②

[해설] 최적모형은 합리모형과 초합리성을 결합한 모형으로 정책결정자의 직관적 판단 등의 의 초합리성을 정책결정의 중요한 요인으로 인정한다(하이패스 행정학 p332).

<<핵심체크>> 최적모형

의의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의 결합뿐만 아니라 초합리성을 가미한 현실적이고 규범적인 모형
모형선택		합리적 결정의 효과가 비용보다 크거나 같을 경우에만 합리모형 적용
정책결정과정 (정책과정 전반)	초정책결정	정책결정에 대한 정책결정으로 초합리성이 가장 강조되는 단계(7단계)
	정책결정	본래적 의미의 정책결정으로 주로 합리성이 적용되는 단계(7단계)
	후정책결정	정책집행과 정책평가 후 평가결과를 환류하는 단계(4단계)
특징		• 양적인 동시에 질적인 모형 : 양적분석을 주로 하되 질적 분석(초합리성) 가미 • 기본적으로 경제적 합리성(대안의 최적화) 중시 • 중첩된 과정과 절차 중시 • 확장된 환류과정을 통한 정책결정능력의 지속적인 고양 • 점증모형의 개선 및 활용 고려 • 정책결정체제의 개선(법적 구조화) 강조
장점		• 정책결정을 위한 자원, 시간, 능력이 부족한 경우 적용 용이 • 정책결정체제를 포괄적으로 체계화(거시적 · 체제적 시각)
단점		• 초합리성의 강조로 신비주의나 주먹구구식 결정을 초래할 위험성 • 불완전한 합리모형에 불과

문 14. 다음 ㉠과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공직자윤리법」에서는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부터 (㉠)간 퇴직 전 (㉡)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	㉡
①	3년	5년
②	5년	3년
③	2년	3년
④	2년	5년

[정답] ①

[해설] 「공직자윤리법」에서는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부터 (3년) 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하이패스 행정학 p230).

<<핵심체크>> 우리나라의 윤리규범

적극적 윤리 규범	「공무원 헌장」	•공익을 우선시하며 투명하고 공정하게 맡은 바 책임을 다한다.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 행정을 구현한다. •청렴을 생활화하고 규범과 건전한 상식에 따라 행동한다.
	특징	① 적극적 · 추상적 윤리규범, ②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낮음
소극적 윤리 규범	「국가 공무원법」	•13대 의무 – ① 성실 의무, ② 선서 의무, ③ 복종 의무, ④ 직장이탈 금지 의무, ⑤ 친절 · 공정 의무, ⑥ 영리 · 겸직 금지 의무, ⑦ 종교 중립 의무, ⑧ 비밀 준수 의무, ⑨ 청렴 의무, ⑩ 품위유지 의무, ⑪ 영예 등 제한, ⑫ 정치적 중립 의무, ⑬ 집단활동 금지 의무
	「공직자 윤리법」	•재산등록 및 공개의무 : 국가 및 자치단체의 4급 이상 공무원은 재산을 등록해야 하며, 1급 이상 공무원은 등록된 재산을 공개해야 함(공기업 및 공직유관기관의 임직원도 포함) •퇴직공무원의 취업제한 : 등록의무자는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음(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외국인 또는 외국정부로부터 받은 선물신고 •이해충돌방지 의무 •직무관련성 있는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 재산공개대상자 등은 직무관련성이 있는 주식의 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매각, 주식백지신탁에 관한 계약 체결, 주식과 직무관련성 없는 직위로 변경 신청 등을 해야 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위원회 설치 · 운영법」	•부패신고 의무 : 공직자는 다른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 등에 신고해야 함 •국민감사청구 :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해 공익을 해하는 경우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음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 파면 ·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5년 동안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음 •내부고발자 보호
	특징	① 소극적 · 구체적 윤리규범, ② 타율적이지만 구속력과 실효성 높음

문 15.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쉬크(Schick)는 통제 – 관리 – 기획이라는 예산의 세 가지 지향(orientation)을 제시하였다.

② 영기준예산제도(ZBB)가 단위사업을 사업 – 재정계획에 따라 장기적인 예산편성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면, 계획예산제도(PPBS)는 당해 연도의 예산 제약 조건을 먼저 고려한다.

③ 우리나라는 예산편성과 성과관리의 연계를 위해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④ 조세지출예산제도는 조세지출의 내용과 규모를 주기적으로 공표해 조세지출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정답] ②

[해설] 계획예산제도(PPBS)가 단위사업을 사업 - 재정계획에 따라 장기적인 예산편성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면, 영기준예산제도(ZBB)는 당해 연도의 예산 제약 조건을 먼저 고려한다(하이패스 행정학 p750).

<<핵심체크>> 계획예산제도(PPBS)와 영기준예산제도(ZBB)의 비교

분류기준	계획예산제도(PPBS)	영기준예산제도(ZBB)
예산의 중점	정책수립 또는 목표설정	사업평가를 통한 예산의 감축
핵심 행위자	최고관리자와 참모	상 · 하 관리자
예산의 기능	계획 중시(새로운 정책의 형성)	조정 · 평가 중시(기존 정책의 평가)
책임	•기획책임 집권화 •관리책임 분권화	•기획책임 분권화 •관리책임 집권화
분석	시스템 분석과 비용편익분석	비용편익분석
조직 간 관계	개방체제(조직 간 구분 없음)	폐쇄체제(조직 간 구분 중시)
결정의 흐름	거시적 · 하향적(집권)	미시적 · 상향적(분권)
예산의 지향	기획지향적	평가지향적
사업의 초점	정책지향적(거시적 정책 중시)	사업지향적(미시적 사업 중시)
예산의 초점	사업대안	사업대안과 금액대안
관심 대상	신규사업에만 관심	기존사업과 신규사업 모두 분석
결정의 시각	객관적 시각	주관적 시각
필요 지식	경제정책	관리능력
모 형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의 혼합	완전한 합리모형
시간관	장기적(5년)	단기적(1년)
기 준	전년도 예산 기준	영점부터 시작

문 16. 중앙과 지방의 권한배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방자치발전위원회를 둔다.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한 사무가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병행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으로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둔다.

④ 「지방자치법」은 원칙적으로 사무배분방식에 있어서 포괄적 예시주의를 취하고 있다.

[정답] ①
[해설]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지방자치발전위원회를 둔다(하이패스 행정학 p831).

문 17.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계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치계층 측면에서 단층제로 운영되고 있다.

② 자치계층은 주민공동체의 정책결정 및 집행의 단위로서 정치적 민주성 가치가 중요시된다.

③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으로 자치구를 둘 수 있다.

④ 자치계층으로 군을 두고 있는 광역시가 있다.

[정답] ③
[해설] 「지방자치법」에 일반규정으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에 자치구를 둘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특별규정으로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는 자치단체를 두지 아니하고 도시지역에는 동을, 그 외에는 읍·면을 두도록 하고 있다(하이패스 행정학 p836).

<<핵심체크>>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계층

<table>
<tr><td rowspan="6">광역자치단체</td><td>의의</td><td colspan="2">정부의 직할로 두고 있는 보충적·보완적 자치계층</td></tr>
<tr><td>특징</td><td colspan="2">•「지방자치법」에 지정에 관한 특별한 요건을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개별 법률을 통해 특정지역을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로 지정할 수 있음
• 광역자치단체들은 정부 직할의 자치단체로 원칙적으로 법적 지위가 동일하나 서울특별시,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특수성을 고려해 특례를 둠</td></tr>
<tr><td rowspan="3">특례</td><td>서울특별시 특례</td><td>① 행자부장관의 지방채 발행 승인여부 결정시 국무총리에게 보고, ② 행자부장관의 자치사무 감사시 국무총리의 조정,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서울특별시장의 의견이 다른 경우 국무총리의 조정 등</td></tr>
<tr><td>제주특별자치도 특례</td><td>① 관할구역 안에 자치단체를 두지 아니하고 행정시를 둠(단층제), ② 도지사 소속 하에 감사위원회를 두고 자치감사뿐만 아니라 국가위임사무에 대한 감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위원회에 의뢰, ③ 자치경찰제 실시 등</td></tr>
<tr><td>세종특별자치시 특례</td><td>관할구역 안에 자치단체를 두지 아니함(단층제)</td></tr>
<tr><td colspan="3"></td></tr>
<tr><td rowspan="3">기초자치단체</td><td>의의</td><td colspan="2">주민과 직접 접촉하는 본래적 자치계층</td></tr>
<tr><td>주요쟁점</td><td colspan="2">• 시는 도의 관할구역 안에, 군은 광역시·특별자치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자치구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세종특별자치시는 자치구를 두지 않음)의 관할구역 안에 둠
• 자치구의 자치권의 범위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과 다르게 할 수 있음(자치구는 시·군에 비하여 자치권의 범위가 좁고 지방세목의 수도 적음)
• 시와 군을 통합한 지역이나 인구 5만 이상의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 등은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할 수 있음
•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특수성을 인정해 특례시로 인정</td></tr>
<tr><td colspan="2">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특례</td><td>자치구가 아닌 구(행정구)를 둘 수 있고 도가 처리하는 사무의 일부를 시가 직접 처리하게 할 수 있음</td></tr>
</table>

문 18. 정부의 규모와 역할에 대한 행정이론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X-비효율성은 과열된 경쟁에서 나타나는 정부의 과다한 비용발생을 의미한다.

② 지대추구이론은 규제나 개발계획과 같은 정부의 시장개입이 클수록 지대추구행태가 증가하고 그에 따른 사회적 손실도 증가한다고 주장한다.

③ 거래비용이론에서는 당사자 간의 협상 및 커뮤니케이션 비용과 계약의 준수를 감시하는 비용도 거래비용으로 포함한다.

④ 대리인이론은 주인-대리인 사이에 정보비대칭성이 있고 대리인이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하는 경우 역선택(adverse selection)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정답] ①
[해설] X - 비효율성은 과열된 경쟁이 아닌 독점으로 인한 정부의 과다한 비용발생(독점으로 인한 관료들의 관리상·기술상·행태상의 비효율성)을 의미한다(하이패스 행정학 p37).

문 19. 공공서비스 공급주체의 유형과 예시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① 준시장형 공기업 - 한국방송공사

② 시장형 공기업 - 한국마사회

③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 한국연구재단

④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한국소비자원

[정답] ④
[해설] 한국소비자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에 해당한다(하이패스 행정학 p473).

<<오답정리>>
① 한국방송공사는 방송의 공정성을 위하여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는 기관으로 분류되어 있다.
② 한국마사회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준시장형 공기업에 해당한다.
③ 한국연구재단은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에 해당한다.

<<핵심체크>> 우리나라의 공공기관 분류(2016년 기준)

<table>
<tr><td rowspan="5">공기업
(30)</td><td>의의</td><td colspan="3">자체수입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이상인 기관 중에서 지정(시장성이 강한 기관)</td></tr>
<tr><td rowspan="4">유형</td><td rowspan="2">시장형
(14)</td><td>개념</td><td>자산규모 2조원 이상이고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총수입액의 85%)이상인 공기업</td></tr>
<tr><td>예</td><td>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등</td></tr>
<tr><td rowspan="2">준시장형
(16)</td><td>개념</td><td>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td></tr>
<tr><td>예</td><td>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마사회, 한국관광공사, 인천항만공사 등</td></tr>
<tr><td rowspan="5">준정부기관
(90)</td><td>의의</td><td colspan="3">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공공성이 강한 기관)</td></tr>
<tr><td rowspan="4">유형</td><td rowspan="2">기금관리형
(16)</td><td>개념</td><td>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 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td></tr>
<tr><td>예</td><td>국민연금관리공단 등</td></tr>
<tr><td rowspan="2">위탁집행형
(74)</td><td>개념</td><td>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td></tr>
<tr><td>예</td><td>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소비자원 등</td></tr>
<tr><td colspan="3">기타 공공기관(203)</td><td colspan="2">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제외한 기관을 지정</td></tr>
</table>

문 20. 재정성과관리와 재정건전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사후예산제도로 지방재정 건전화를 추구한다.

② 통합재정수지는 재정건전성 분석, 재정의 실물경제 효과 분석, 재정운용의 통화부문에 대한 영향 분석 등에 활용될 수 있다.

③ 총사업비관리제도는 시작된 대형사업에 대한 총사업비를 관리해 재정지출의 생산성 제고를 도모한다.

④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주관으로 실시하는 사전적인 타당성 검증、평가제도이다.

[정답] ①

[해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사전적 · 중기적 예산제도로 지방재정 건전화를 추구한다(하이패스 행정학 p888).

<<핵심체크>> 우리나라의 지방재정관리제도

공기업		사전예산관리	사후재정관리
중앙 정부	재정 · 예산 관리	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참고자료)	지방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재정 위기 사전 경보 시스템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보통교부세 인센티브제
		국고보조사업 운영지침(개별 부처)	지방교부세 감액제
		지방채 총액한도액 초과 발행 통제	국고보조사업 정산 보고
			발생주의 · 복식부기 정부회계
			감사원 감사와 국회의 국정감사
	정책 관리	성인지 예산제도(여성가족부)	국고보조사업 이력관리(행정자치부)
		성별영향평가제도(여성가족부)	행정자치부 합동평가(국고보조사업)
		참여예산제(행정자치부)	국고 보조사업평가(기획재정부)
지방 자치단체		프로그램 예산제도	행정사무 감사(지방의회)
		지방채 발행(총액한도액 이내 발행)	재정사업 평가(자체평가)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	
		지방재정영향평가제도	
		지역통합재정통계의 작성	
지역주민		주민 참여 및 감시(주민참여예산)	• 재정 운영 상황 공개(재정공시) • 주민소송제도

■ 정답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①	③	④	③	③	③	①	④	③	②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②	④	②	①	②	①	③	①	④	①